

2020년 2월



# 문재인정부 실정 보고서

제 2 권

위기에 처한 국가 안보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 위기에 처한 국가 안보

## 평화 환상에 허물어지는 국가안보

지금 우리는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위기에 처해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계가 칭송하고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평화관(平和觀) 안보 정책 때문이다.

튼튼한 안보는 국가존립의 필수조건이다. 안보 없이는 평화도 번영도 없다. 그러나 안보는 약속이나 협정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로마 전략가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했다. 강한 군사력과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각오 없이는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없다. 흔히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얘기하지만, 군사력의 뒷받침 없는 대화와 협상은 굴복을 의미할 뿐이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기만적인 북한정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정치의 냉엄함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다.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화이고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은 자위용이며 남북 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가 먼저 군비축소와 경제지원을 하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해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발을 했고 남북 합의사항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 같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포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 북한이 요구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설정, 휴전선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중단에 합의했다. 판문점에서 실속 없는 '평화 쇼'를 마친 후에는 "이제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다"고 선언해 우리 국민들이 평화의 환상에 빠지게 만들었다.



## 북핵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문재인 대통령

한국은 북한 핵의 직접 피해자이고 북핵 폐기 노력을 주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북한에 유리하게 해석해 미국의 북한 핵 대책을 실패로 이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은 자위용이고 안보가 보장되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정은에게 가장 큰 안보위협은 ‘발전된 대한민국의 존재’이며, 핵은 미국을 위협해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한반도 적화통일 이전에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무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둘째,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대화와 압박이 함께 필요하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압박을 가할 때마다 이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자 "전쟁은 안 된다"면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나섰고, 문재인 대통령 특보는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선언했다.

셋째,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왜곡 전달해 미국의 오판을 초래했다. 2018년 3월 방북한 정의용 특사는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고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김정은의 말을 왜곡,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미국에 전달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나서도록 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표시하기 시작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국 때문에 북한의 의도를 오판하게 됐다고 계속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넷째,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 비핵화’ 대신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기지의 핵무기, 태평양 지역 배치 핵무기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시키고 핵 협상을 지연



시키기 위해 김일성이 오래전에 만들어 낸 기만적 언어전술이다. 문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왜 이런 합의를 했는지 국내외 전문가들은 몹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섯째, 문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 계속 어깃장을 놓아 국제공조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추구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영변핵시설 폐기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맞바꾸는 ‘굿이너프딜’(Good Enough Deal)을 주장해 미국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유엔제재에 대해서도 어깃장을 놓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유엔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과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했으므로 이제는 국제사회가 화답할 차례”라면서 대북제재 해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유엔제재 이행 노력에 수수방관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 수십만 톤의 북한석탄이 한국에 반입되고 막대한 양의 한국산 정제유가 북한에 들어가도 손 놓고 있으면서 대북지원을 못 해 안달이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남북관계가 비핵화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계속 듣고 있다.

## 거짓평화로 해체되는 국방.안보 체제

북한은 현재 60여 개의 핵탄두, 1,000여 기의 미사일, 500여 문의 장사포와 11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12개의 핵탄두를 늘려 가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기습남침을 위한 20만 명의 특수전 부대를 가지고 있고 지상군의 70%, 해공군의 50%를 휴전선 인근에 배치하고 있으며 휴전선-서울 거리가 45km에 불과해 우리는 북한의 기습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2017년 11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에 성공한 후 제의한 위장 평화공세를 받아들여 우리의 국방.안보 체제를 앞장서 허물기 시작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포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 북한이 요구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서해 북방



한계선(NLL) 평화수역 설정, 휴전선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중단에 합의했다. 그 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해 우리 군을 사실상 무장해제 시켜 버렸다. 휴전선 일대에서 일체의 비행이 금지돼 북한의 기습공격 징후 파악이 어려워졌고 전투 초기 우리 공군력의 우위를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서해 평화지대 설치, 한강수로 공동조사, 비무장 지대 감시초소(GP) 철수 및 휴전선 지뢰 제거로 북한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됐고 서해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포사격 훈련을 하려면 포항으로 가야 한다.

9.19 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작년에만 20회의 미사일 및 방사포 실험을 했고 11월에는 소청도 서쪽 창린도에서 김정은 지도하에 해안포 사격을 했다. 이런 문제 협의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하데 문재인 정부는 국방태세 해체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전방 배치 2개 사단을 포함한 6개 사단을 줄이고 있고 전방 탱크 방어벽과 해안선 철조망이 모두 제거됐다. 사병 복무기간이 갑자기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됐고 금년까지 11만 명의 병력을 감축해 내년부터는 우리 군 50만 명으로 110만 명의 북한군을 대적해야 한다.

군에 대한 잘못된 처우로 군의 명예와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의 거짓 폭로로 육군대장이 억울하게 구속되고 옷을 벗었으나 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군인권센터의 기무사에 관한 거짓 폭로로 대통령 하명 조사가 이뤄져 4개월간 9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200여 명을 조사하고 국군기무사령부 해체와 이재수 사령관 자살로 이어졌으나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

소위 ‘인권중시’ 부대 운영과 일선 지휘관의 보신주의로 군기가 땅에 떨어져 지휘관들이 부대를 제대로 통솔하기가 어렵다. 사고 날까 걱정하는 지휘관들 때문에 매년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조기 전역하는 병사들이 6,000명을 넘는다.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 삭제와 평화중심 교육으로 군 정신 전력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이제 세계 최강의 훈련, 세계 최강의 정신력을 자랑하던 우리 군이 '보이스카우트 군대'라는 얘기까지 듣게 됐다.



## 한미동맹 해체로 향하는 문재인 정부

한미동맹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이다. 그동안 한미동맹은 안보를 지키고 경

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또 한미동맹은 7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고 미국은 주변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동맹이다.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시장경제 체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 강대국 가운데서 가장 동맹을 존중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중국의 동맹이라면 지금 중국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 생각하면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급속히 이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줄곧 한미동맹과 한미공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다르다.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는 미국에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국과 사전협의를 전혀 없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당신들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고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중국 편향 정책으로 미국의 불신을 사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지지하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는 적극 참여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 몰래 ‘대중국 3불 정책,’ 즉 ①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②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가입하지 않고, ③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중국을 의식해 사드 배치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또 미·북관계의 중재자로 자처하면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반대해 미국 조야(朝野)로부터 한국이 북한 편인지 미국 편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그 외에도 ①미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거부하고, ②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③제반 조건이 충족될 때 실행하기로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전환을 추진하고, ④이미 일정이 잡혀 있는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반환을 독촉하고, ⑤유엔 결의에 따라 한국전 참전 16개국이 유사 시 언제나 유엔사령부에 추가병력을 파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들 참전 16개국들에게 유엔사에 추가병력을 파견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고, ⑥ 미국이 주도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불참하고, ⑦최근에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자 여권 의원 47명이 "미군, 갈 테면 가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미동맹에 흠집을 내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태도를 보면 겉으로는 한미동맹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미국을 계속 굶어 미국 스스로 한국을 떠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우리는 흔히 미국이 자국 이익 때문에 한반도에서 발을 빼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베트남과 필리핀 사례를 보면 미국은 상대국이 원치 않을 경우 과감하게 주둔군을 철수시킨다. 사사건건 미국 정책에 어긋장을 놓는 나라, 좌파의 우방국 대사관 난입을 방치하는 나라, 김정은 화형식을 했다고 현역 의원에게 소환장을 보내면서 미국 국기와 트럼프 화형식은 모른 체하는 나라, 미국이 이런 나라를 계속 소중한 동맹으로 생각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 대공 보안태세를 앞장서서 무력화시키는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와의 싸움은 사상전에서 시작되고 사상전에서 지면 군사전(軍事戰)에서도 지게 마련이다. 사상전 승리를 위해서는 불순사상 차단과 반국가·반체제 세력 색출 및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대공 보안태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다.

평창올림픽 공식행사에서 미전향 북한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칭송하고 그의 대형 서화(書畵)를 청와대에 걸어 놓았다. 작년 현충일 기념사에서는 북한 인민군 창설 주역이자 6.25 전범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찬양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추진했다. 대통령이 앞장서 국가 위해(危害)분자를 칭송하니 공간기관은 무력화되고 국민 안보의식은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



간첩색출을 담당할 공간기관들도 무력화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원을 축소하고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려 했으나 반대여론에 부딪쳐 실행치 못했다. 그 대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무력화시켜 이젠 간첩 잡았다는 얘기를 듣기 어렵게 됐다. 또 최근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이관과 국내정보 수집 기능 폐지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권한분산과 견제·균형을 위한 것이라 했는데, 경찰과 국정원에 분산되어 있는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에 통합시키는 게 무슨 권한분산이고 견제·균형인지 모르겠다. 대공수사 기능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도 헛말에 불과하다. 간첩 색출을 위해서는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 정보와 수사의 결합이 필수적인데 해외조직도 없고 타국에서의 정보·수사 활동이 불법화돼 있는 경찰이 뭇을 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 더욱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로 이관되면 보안 문제 때문에 국정원이 지난 60여 년간 축적해온 노하우, 파일 및 전문요원을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보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개혁’을 구실로 국가안보 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북한과의 이념전쟁을 위해서는 북한체제 찬양을 금지해야 하나 법원의 엄격한 법 해석으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는 사실상 사문화 되었고 이젠 백주 대낮에 광화문 네거리에서 백두칭송위원회, 김정은 서울방문 환영위원회, 위인맞이 환영단 등 친북단체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간첩사건이 나면 좌파 변호사들의 릴레이 면회, 진술거부 종용, 인권침해 고발로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는 대한민국과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폄훼하고 김일성 세습체제를 미화하는 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좌파세력의 미국 대사관 난입을 방치하면서 경찰에 그 책임도 묻지 않았고 난입자 처벌도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정부가 앞장서 종북세력을 격려·고무하는 형국이다.

## 굴종적 남북관계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대화와 압박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누가 대북제재 얘기라도 꺼내면 ‘대화냐 전쟁이냐’며 국민들에게 겁을 준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굴종적 태도로 일관한다. 남북 정상회담 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고 2018년 9월 평양방문 시에는 북한 주민들 앞에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답방에도 목을 매고 있다. 2018년 평양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의 답방을 간청했으나 거부됐고 작년 11월 부산개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김정은을 초청했으나 북한은 마른나무에 물 내기, 소뿔 위에 닭 알 쌓을 궁리라고 우리 대통령을 모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금년 신년사에서 다시 김정은 초청 의사를 밝혀 김정은 방문에 목을 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지원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대북지원 문제에서도 굴종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2017년 북한이 유엔제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민간단체의 말라리아 방역물자 지원을 거부한 이후 “꼴사납게 놀아내고 있다”라느니 “희떠운 소리를 하고 있다”라느니 하면서 식량 5만 톤과 모자 의



료 지원금 500만 달러를 모두 거부했으나 지금도 대북지원을 하지 못해 안달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막말 비난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수행한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고 핀잔을 주었으나 우리 정부는 항의 한마디 못했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 웃기는 사람, 겁먹은 개, 밑의 사람이 써준 것을 졸졸 읽거나 하는 사람 등으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계속해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 굴욕 외교, 망신 외교, 반일 외교로 국격과 국가 이익 손상 초래

문재인 정부는 굴욕 외교, 망신 외교로 국가이익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굴욕 외교, 굴종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놀라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굴욕적 3불 약속을 했고 중국 정부의 한국기업에 대한 적대 조치에 대해서는 항의 한 번 못하고 있다.

반일 외교로 한일관계는 사상 최악의 상태가 됐다. 무역분쟁을 이유로 안보 자해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거부카드를 꺼내 든 것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세계 최고인 일본의 대북 신호정보, 통신정보 및 영상정보를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보다 우리에게 훨씬 중요하다. 따라서 시중에서는 김일성의 ‘갓끈 전략’ 실현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까지 나돈다. 김일성이 1960년대부터 미국과 일본 중 한 나라를 한국에서 떼어내면 한국은 ‘끈 떨어진 갓’이 돼 한반도 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해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숙 외교, 대북 굴종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계속 냉대를 받고 있다. 중국 국민방문 시에는 네 번이나 일반식당에서 혼밥을 먹었고 수행기자는 중국 공안들에게 몰매를 맞았는데 항의 한 번 못했다. 미국 방문 시에는 미국 측 공항영접 인사가 한 명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과 2분 정상회담을 한 적도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정상과의 회담에서는 대북제재 해제를 역설하다가 정면에서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회의 시 외톨이가 되어 영부인과 둘이 외롭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고 세계가 칭송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왜 저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분통이 터진다.